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시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의장단 강원경자청 업무 보고	1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장 방문	1
G1방송		강원경자청, 도의회 의장단 올해 업무보고	2
강원도민일보	03면	"태양광 발전 자연훼손·재해 대응책 마련해야"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농수위, 베트남 출장...농수산 정책 점검	4
강원도민일보	02면	도교육청 지난해 삭감된 '전자칠판' 예산 올해 추경 재편성	5
江原日報	04면	전자칠판 예산 151억 올해는 통과되나?	5
춘천MBC	온라인	강원교육청, 추경 예산안 4조 2천 90억 제출	6
G1방송	온라인	여야 재정비, 강원도 중진 '역할' 기대	7
강원도민일보	20면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일손돕기 공감대 넓히자"	8
江原日報	02면	"산단 조성보다 청년이 살고 싶게 만들어야"	9
江原日報	25면	[사설] 폐광지역 회생 대책,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10
G1방송	온라인	강원자치도 "속초 연안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	11
MBC 강원영동	온라인	김진태 지사,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실패 책임지겠다	12
江原日報	02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도 토지 규제 여전”	13
스포츠서울	온라인	홍성기 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농림지역 존치는 ...	14
LOCAL세계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 5분 자유발언	15
이뉴스투데이	온라인	전찬성 강원도의원 "창업·투자유치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	16
엔사이드	온라인	전찬성 의원 “기약 없는 반도체에 혈안되어, 정작 중요한 ...	17
MBC 강원영동	온라인	최종수 강원도의원, 대관령휴게소 부지 '통합 관리 체계' 필...	18
스포츠서울	온라인	최종수 도의원, 舊 대관령휴게소 부지 ‘통합 관리 체계’ 구...	19
LOCAL세계	온라인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舊 대관령휴게소 부지 ‘통합 관...	20
강원네트워	온라인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	21
엔사이드	온라인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	22
중부뉴스통	온라인	“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	23
글로벌뉴스	온라인	이지영 강원도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본...	24
중부뉴스통	온라인	최재민 도의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할 수 있도...	25

신아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	26
東 亞 日 報	16A	강원도의원 막말에 공무원노조 반발	27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청 노조 "도의원 '갑질 발언' 공개 사과하라"	27
 KBS 춘천		“콩 까먹는 소리”, “설치니까”...지방의원 막말 논란	28
G1방송		녹색정의당 도당 "도의원 막말 대책 마련해야"	29
江 原 日 報	02면	“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를” 도청공무원노조·정의당	29
江 原 日 報	27면	[동정]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영월)	30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홍성기(홍천·원주) 도의원·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	30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유순옥(비례) 의원	30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박찬흥 도의원	30
강원도민일보	01면	첨단산업 보증 수표 강원 혁신특구 목전	31
강원도민일보	02면	꾸준한 투자·육성 '강원형 바이오' 전국 거점 부상	32
강원도민일보	01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전쟁	33
강원도민일보	09면	'부지 vs 접근성' 격돌 ... 유치 도전 지자체 정치력 시험대	34
강원도민일보	06면	'빛바랜 관광 1번지' 강원 방문 주춤	35
江 原 日 報	01면	올해 폐광기금 1,710억 '역대 최고액'	35
江 原 日 報	05면	'한명이 240대 본다' CCTV 감시 공백 우려	36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 관광인프라 확장 랜드마크 띄운다	37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 도로망 확충 '20분대 생활권' 도약	3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국제 빙상장, 비수도권 건립 마땅	38
江 原 日 報	25면	[사설] 스토킹 피해 상담 급증, 중범죄로 적극 대응해야	3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고물가 방관하면 관광산업 타격 이어져	40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 의장단 강원경제자유청 업무 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은 25일 동해시에 소재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혁열 도의장,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최재석·김기하·유순옥 도의원, 김종욱 도의회 사무처장,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4년 04월 25일 (목)

종합

강원도의회,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장 방문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25일 동해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엔사이드, 뉴스쥬 등 41개 언론사 보도

G1방송

2024년 04월 25일 (목)

강원

강원경자청, 도의회 의장단 올해 업무보고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2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에게 올해 업무를 보고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자청은 최근 망상제1지구 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 시행자 재공모 일정과 평가 절차 등을 비롯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망상지구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3면

“태양광 발전 자연훼손·재해 대응책 마련해야”

“일사량 적어 부지로 부적합” 주장

창업·투자 통합시스템 구축 제안

도의회 임시회 32건 원안가결 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끝으로 25일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방지 조례 개정안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상정된 안건 32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선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강원도는 일사량이 하루 기준 3시간을 겨우 넘는 정도여서, 애초에 태양광 발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수(철원) 의원은 “강원도에서 축구장 670개 면적에 해당하는 143만 평의 산림이 태양광 시설로 인해 훼손됐고, 철원, 횡성 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위험하다”며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포함됐다. 도에서는 태양광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



김정수

전찬성

으면서 주민 소득도 늘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찬성(원주) 의원은 “삼성반도체 같은 기업은 대기업 유치보다 창업에서 기업의



홍성기

최종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강원형 통합정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기(홍천) 의원은 “비농업진흥 지역에 대해 관리지역 승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수(평창) 의원은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지적하며 “부지와 시설을 통합 관리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명소로 재탄생 시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호

KBS 춘천

2024년 04월 25일 (목)

강원

강원도의회 농수위, 베트남 출장...농수산 정책 점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도의원 8명이 베트남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오늘(25일)부터 이달(4월)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이번 출장에서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농업과학원, 옌소 수산시장 등을 방문해 베트남 농수산 정책을 살펴봅니다.

이번 출장에는 의원 1인당 16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고순정 flyhigh@kbs.co.kr

강원도민일보

도교육청 지난해 삭감된 '전자칠판' 예산 올해 추경 재편성

1회 추경 4조2090억원 제출

전자칠판 2020대 151억원

속보=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학교 전자칠판 예산(본지 1월16일자 4면 등)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25일 도의회에 2024년 도제1회 추경으로 당초 예산 3조9709억원보다 2381억원(6.0%) 늘어난 4조209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도교육청이 확보하려는 사업 예산 가운데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우선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된 사업은 '업체 선정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전자

칠판 사업이다. 올해 도교육청은 1회 추경에 학교 전자칠판 지원 예산으로 151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목표 지원 대수는 2020대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과 춘천고 학생 독립운동기념관 신축 사업도 각각 부지매입비 26억원과 설계비 6억7000만원이 편성돼 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결과 발표 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디지털·AI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칠판이 필수지만 감사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일단 예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2면

산을 편성하고 감사 결과와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밖에 1회 추경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운영 94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82억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80억원, 늘봄 실무사 인건비 54억4000만원, 초·중·고등학교실 환경개선비 지원 42억2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 예산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민영

江原日報

전자칠판 예산 151억 올해는 통과되나?

2024년 04월 26일 (금)

사회 04면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편성
평창교육도서관 신축도 재편성
내달 8일부터 도의회 심사 주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전자칠판 학교 지원 사업비와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부지 매입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 도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4조2,090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381억원(6.0%)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난해 도의회 심의에서 155억원 전액 삭감됐던

'전자칠판 학교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151억여원이 다시 편성됐다. 전자칠판 사업은 지난해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올해 1월부터 강원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자칠판 사업 감사결과가 추경안 편성 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해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부지 매입비도 재편성되면서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사업 이외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168억원, 학교복합시설 건립비 25억

원, 고교학점제박람회 운영비 2억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3억원 등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등 국정과제와 학력 향상 등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임재욱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안은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디지털 기반 교육 등 미래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모든 학생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8일 개최하는 제328회 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동휘기자 yulnyo@

춘천MBC

2024년 04월 25일 (목)

강원

강원교육청, 추경 예산안 4조 2천 90억 제출

강원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3조9천709억 원보다

2천381억 원 늘어난

4조 2천 90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늘봄학교 운영 210억 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108억 원,

교과보충 프로그램 23억 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94억 원 등입니다.

1차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강원도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송미

G1방송

2024년 04월 25일 (목)

강원

여야 재정비, 강원도 중진 '역할' 기대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앵커]

총선은 끝났지만, 여야 모두 후속 조치에 분주합니다.

특히 총선 참패를 수습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그런데요,

강원도 중진 의원들도 핵심 역할을 맡으며 당 재편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porter]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와 중진 회의를 거듭 열며 총선 결과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원내 대표를 뽑고,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짤 계획입니다.

강원도 중진 의원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 후보군에 올랐던 이양수 의원은 출마 대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고, 이철규 의원은 유력한 '친윤'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에 책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5선 권성동 의원은 당권 주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사부터 비대위의 방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설까지 당 재건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물러난 만큼 이번에 다시 당대표에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도의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같이 다음 달 3일 원내 대표를 선출해 당을 재정비합니다.

3선 송기현 의원이 계파색보다는 두루 선망이 두터운 '협치형' 중진으로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가장 뜨거운 자리인 법사위원장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차기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성공 여부와는 별도로 추후 상임위와 위원장 배분 과정에도 전략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G1뉴스 김도환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인물 20면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일손돕기 공감대 넓히자”

철원서 발대식·영농 봉사활동
농업인 노고 격려·현장 소통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 앞장”

강원도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을 25일 철원을 화지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김진태 지사, 김경록 강원농협본부장,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등 도단위 기관·단체장과 철원군 이현중 군수, 박기준 의장, 김정수 도의원, 철원지역농협 조합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이 25일 철원을 화지리에서 김진태 도지사 등 도단위 기관단체장과 이현중 철원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촌 일손돕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참석자들도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농촌 일손돕기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

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철원읍 화지리 임영택 농가에서 벼 모판을 심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해 모내기 작업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농업인들과 새참을 함께하며 벼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 및 일손돕기를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더욱 많은 분들이 봉사 참여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촌의 고령화,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발대식 후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철원지역 군사규제 개선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재용 yiyong@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2면

2024 춘천 지역성장과 인구전략 포럼



◇2024 춘천시 지역성장과 인구전략 포럼이 25일 강원대 글로벌경영관에서 육동한 춘천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호 춘천시장, 이재수 강원대 교무처장을 비롯한 내빈과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산단 조성보다 청년이 살고 싶게 만들어야”

춘천시가 강원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인구담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역성’을 살린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잇따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원대, 강원일보 등이 25일 강원대 글로벌경영관에서 개최한 ‘2024 춘천시 지역성장과 인구전략 포럼’에 참석, 기조강연에 나선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창조산업, 로컬 상권을 개발, 인재를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 브랜드와 콘텐츠타운’을 주제 발표한 모 교수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청년이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석했다.

도·춘천시·강원대·본보 공동 ‘지역성장과 인구전략 포럼’ 모종린 연세대 교수 “원도심 중심 창조산업·로컬상권 개발” 조명호 강원대 연구위원 “춘천은 수도권 인구 유출 막는 댐”

두 번째 기조 강연에 나선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춘천은 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댐의 역할을 맡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의 가장 큰 자원인 호수를 끼안는 형태로 도시 계획을 발전시켜 차별화된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6개 대학이 포진한 특징을 살려 시내 주요 대학을 거점 삼아 문화적 콘텐츠를 확장·육성하

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를 좌장으로 임미선 도의원, 경창현 춘천시 자치행정과장, 박인옥 강원대 교수,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시민이 생각하는 춘천시의 지역성장-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특화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호 춘천

시장, 이재수 강원대 교무처장, 임미선 도의원 등 내외빈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춘천 인구가 유지되고 있지만 한번 인구가 감소하면 독처럼 무너질 수 있어 오늘 포럼의 중요성이 크다”며 “교육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유치 성과가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성장 전략들이 춘천시 인구정책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윤호기자

江原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사설/칼럼 25면

폐광지역 회생 대책,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부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대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제정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폐광 지역에 지난 20여년 동안 수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와 각종 레저관광시설이 들어섰지만 지역의 경쟁력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한영(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이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탄광지역 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폐광지역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경제 다각화를 위해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즉, 탄광 폐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T), 관광산업, 농업 및 축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정책이 더없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자원과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폐광지역의 인프라 개선도 미룰 수 없다.

폐광지역은 ‘내륙의 오지’로 불리고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폐광지역

과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등 동해안 남부권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폐광지역의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주민들의 직업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이 있어야 한다. 폐광지역에는 탄광산업의 종사자들이 많다. 이들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이직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이 요구된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기술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폐광지역의 관리는 주민의 참

수조원 넘는 예산 투입, 지역 자생력 ‘미미’

이한영 도의원, ‘폐광지 개발센터’ 설립 촉구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과 소통 강화해야

여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도모해야 한다.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나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그래서 중요하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부단한 관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폐광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4년 04월 25일 (목)

G1방송

강원

강원자치도 "속초 연안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준공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정상화에 강원자치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4일) 열린 강원자치도의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강정호 의원은 "민간 사업자에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을 해 줬기때문에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선 안 된다"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 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원상회복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04월 25일 (목)

MBC 강원영동

강원

김진태 지사,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실패 책임지겠다

박은지

지난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경매에서 민간 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김진태 지사 지시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도정 질문에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원래 낙찰했던 가격 선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는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북방향로 운항을 위해 지어진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국가 향만부지에 민간 업체가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 44억 원에 시작한 최저매각금액은 몇번의 유찰로 3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 3월 경매기일에 5억 2천여만 원을 써낸 민간업체가 낙찰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10억 원의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정호 강원도의회원은 도정 질문에서 1년이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당시 김진태 지사의 지시로 강원도가 경매 참여를 미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강정호 / 강원도의원
"지사님 지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마지막 4월 4일에 낙찰받을 것,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김진태 지사는 사용 용도가 국제여객선터미널로 한정돼, 민간업체가 낙찰받을 거라 예상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조치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였다며 낙찰 금액 수준으로 다시 매입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정호 / 강원도의원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어쩔수 없었다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태 / 강원도지사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다시 매입을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현재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확보했던 예산의 두 배입니다.

최우홍 / 강원도 해양수산정책관
"협상을 세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범위보다 2배 많은 2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런데..."

강원도는 매각 협상과는 별도로 업체에 향만부지 무단점용으로 2억 3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업체 압박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가 큰 데다 1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상황에서,

실제 매입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江原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2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도 토지 규제 여전”

홍성기 도의원 “상당수 농림지역 묶여... 국토계획법 개정 절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강원지역 토지 상당수가 여전히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민들이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 의원은 25일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정비로 속초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의 3만9,083필지, 3,924만2,763㎡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이들 토지의 상당수

는 여전히 국토계획법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규제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친다”며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에 개선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찬성(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삼성반도체 같은 기약 없는 대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된

사이 중소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 중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철원, 횡성, 홍천 등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김정수(국민의힘·철원) 의원은 “덜컾한 산림을 훼손하며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도가 태양광 발전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수(국민의힘·평창) 의원은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 관리 주체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기자

스포츠서울

2024년 04월 25일 (목)

사회

홍성기 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농림지역 존치는 이중 규제”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국토계획법 개정하거나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통한 규제 해소 노력 필요



홍성기 도의원(국민의힘.홍천)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등 비(非)농업진흥지역임에도 종전과 같이 ‘농림지역’으로의 존치는 농지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은 4.25일(목)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2천ha의 43.4%인 4만4천ha에 달한다”면서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 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없이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 정비에 나섰다”면서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9천83필지, 3천924만2천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나,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여전히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다”면서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계획법 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동등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성기 의원은 “이는 농민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강원 농촌의 현실”이라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선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4년 04월 25일 (목)

LOCAL세계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홍성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농림지역 존치는 이중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등 비(非)농업진흥지역임에도 종전과 같이 ‘농림지역’으로의 존치는 농지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분 발언하는 홍성기 도의원

4월25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이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2천ha의 43.4%인 4만4천ha에 달한다”며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9천83필지, 3천924만2천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여전히 국토계획법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다.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동등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농민의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역장이 무너지는 우리 강원 농촌의 현실”이라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을 제시했다.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선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로컬(LOCAL)세계 / 전경해 기자(dejavu0057@gmail.com)

엔사이드, 로컬세계 등 5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4월 25일 (목)

이뉴스투데이

강원

전찬성 강원도의회 "창업·투자유치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김경석 기자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원주)은 25일 제 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업에서 기업 투자유치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강원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김진태 지사는 지방선거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 삼성반도체와 같은 기약없는 대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반면 정작 도민들의 민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중소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경영인에 의하면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임지 관련 문의 차 도로 전화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이른바 전화 뱅뱅이를 돌렸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 "창업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긴급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정책과에서 비슷한 대출지원업무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이나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일자리과에서, 창업중심대학운영사업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또 다시 나뉘져 있었다"며 "창업에서 기업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도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철저히 기업인의 편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때 도내 18개 시·군의 경제가 살찌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석 기자 ks191212@naver.com

2024년 04월 25일 (목)

정치

엔사이드

전찬성 의원 “기약 없는 반도체에 혈안되어, 정작 중요한 알짜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은 관심 밖 뒀

김아영 기자

- 창업 및 투자유치 원스톱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강원자치도의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주춧돌 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은 4.25일(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업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한 강원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태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 삼성반도체와 같은 기약없는 대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정작 도민들의 민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경영인의 체감상, 강원이 얼마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고드린다”면서 “이 경영인에 의하면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지 관련 문의 차 강원자치도로 전화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이른바 ‘전화 뺑뺑이’에 화가 치밀어올랐다는 민원이었다”고 소개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어 “집행부 확인 결과, 이 민원인의 불멘소리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예컨대, 창업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긴급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정책과’에서, 또한 비슷한 대출지원업무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찬성 의원은 아울러,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이나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일자리과’에서, 창업중심대학운영사업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또 다시 나뉘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찬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면서 “창업에서 기업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특히, “창업자이든, 스타트업이든, 나아가 중소기업이든 우리 강원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최적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도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철저히 기업인의 편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때, 도내 18개 시·군의 경제가 살찌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엔사이드, 이뉴스투데이 등 5개 언론사 보도

MBC 강원영동

2024년 04월 25일 (목)

강원

최종수 강원도의원, 대관령휴게소 부지 '통합 관리 체계' 필요

김인성

제3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최종수 강원도 의원은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에는
지난 3월 폐관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포함해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 건물 등이 들어서 있지만, 부지의 관리 주체가 도 에너지정책과,
관광정책과, 강원개발공사 등으로 나뉘어 있어
쓰레기 수거와 시설 보수, 제설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강원도 소유 부지의 관리부서 일원화와 철저한 관리 이행,
산하 시군에 관리 위임 검토의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스포츠서울

2024년 04월 25일 (목)

사회

최종수 도의원, 舊 대관령휴게소 부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강조

5분 자유발언,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 현 실태 알려
관리부서 일원화 및 통합 관리 필요성 역설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4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편 전 영동고속도로의 하행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97 일대)에는 지난 3월 폐관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포함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데, 부지의 소관 주체가 쪼개져 있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舊 대관령휴게소 부지와 넓은 주차장, 그리고 방문객이 드나드는 인근의 전망대 진입로 부지까지 국토부와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로 그 소관이 구역별로 제각각이며, 심지어 도 소유 부지 구역에서도 에너지정책과, 관광정책과, 강원개발공사 등 관리부서가 나뉘어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소유·관리 주체가 여러 곳인 관계로 행정 사각지대처럼 취급되고 있는 해당 부지는 쓰레기 수거, 시설 개보수, 겨울철 제설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과 방문객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수 의원은 '도 소유 부지의 관리부서 일원화', '철저한 관리 이행', '산하 시군에 관리 위임 검토'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수 의원은 "부지와 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을 가치 있는 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4년 04월 25일 (목)

LOCAL세계

지역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舊 대관령휴게소
부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강조

전경해 기자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 관리부서 일원화



▲5분 발언하는 최종수 도의원(사진=전경해 기자)

4월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국힘)이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편 전 영동고속도로의 하행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97 일대)에는 지난 3월 폐관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포함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건물 등이 들어서 있다. 최 의원은 부지의 소관 주체가 나누어져 있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舊 대관령휴게소 부지와 넓은 주차장, 그리고 방문객이 드나드는 인근의 전망대 진입로 부지까지 국토부와 산림청, 강원도 등 소관이 구역별로 제각각이다. 심지어 도 소유지 구역에서도 에너지정책과, 관광정책과, 강원개발공사 등 관리부서가 나뉘어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소유·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행정 사각지대가 된 이곳은 쓰레기 수거, 시설 개보수, 겨울철 제설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과 방문객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소유 부지의 관리부서 일원화', '철저한 관리 이행', '산하 시군에 관리 위임 검토'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부지와 시설의 통합 관리로 지역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을 가치 있는 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했다.

로컬(LOCAL)세계 / 전경해 기자(dejavu0057@gmail.com)

로컬세계, 엔사이드 등 3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4월 25일 (목)

강원네트워크

강원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최재석 (국민의 힘, 동해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서 작성 수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산학연 등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발굴이나 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2024년 04월 25일 (목)

엔사이드

정치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김아영 기자



최재석 (국민의 힘, 동해 1)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서 작성 수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산학연 등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발굴이나 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 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네트워크, 엔사이드 등 4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4월 25일 (목)

중부뉴스통신

지역

“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층간소음 피해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등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를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2024년 04월 25일 (목)

글로벌뉴스통신

정치

이지영 강원도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금순 기자



[강원=글로벌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 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등 제공, ▶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엔사이드, 로컬세계 등 8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4월 25일 (목)

중부뉴스통신

지역

최재민 도의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내 3200여개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 사업 근거 마련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최재민 도의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이 도내 3200여개 경로당의 급식조리·청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민 의원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해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기초 조사 자료 중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리·음식 담당 역할, 식사제공 횟수, 청소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민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2024년 04월 25일 (목)

신아일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기자

도내 3,200여개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 사업 근거 마련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
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함



최재민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의원이 도내 3200여개 경로당의 급식조리·청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민 의원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기초 조사 자료 중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11)에서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2023.10.31.)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리·음식 담당 역할(36.8%), 식사제공 횟수(25.8%), 청소(21.0%)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민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신아일보, 이코노믹포스트 등 9개 언론사 보도

東亞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충청/강원 16A면

강원도의회 막말에 공무원노조 반발

국장에게 “콩 까먹는 소리” 발언
“공개 사과-특권의식 반성하라”

강원도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강원도의 한 여성 국장에게 “콩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며 질책한 것에 대해 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공무원노조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은 도 국장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이를 들은 공무원들은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해당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도의회는 널리 퍼져 있는 갑질을 인식하고 현재까지 이어진 특권 의식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라며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23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 도중 “그 옛날 콩

까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설치니까 지금 문제란 말이예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11월 다른 도의회 이 예산안을 보고하는 공무원에게 막말과 하대를 해 물의를 빚은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발언 직후 강원도 공무원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직원들은 “실·국장들이 동네북인가” “죄인 취급하듯, 공무원 하대하고 무시하는 행동 고쳐야 한다” “갑질, 막말 논란 끊이지 않는다” “화내고 욕박지른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해당 의원은 24일 오후 자유게시판을 통해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해당 의원은 “발언 의도를 곡해해 집행부 공직자들을 폄하했다는 논란이 분분한 점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발언은 지역 방언으로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에 대해 지적한 것이지, 국장 등 공직자들을 폄하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2면

도청 노조 “도의원 ‘갑질 발언’ 공개 사과하라”

녹색정의당 도당 등 재발방지책 촉구

속보=강원도의회이 도청 고위 간부공무원을 향한 ‘갑질 발언’ 논란(본지 4월 25일자 2면)을 빚은 가운데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가 조례 제정을 통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및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도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 도정 질문을 하

는 자리에서 도 국장에게 ‘콩 까먹던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와서 설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해당 발언을 들은 공무원들은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도의원은 회피할 목적으로 도청 내부 게시판에만 사과문을 올리고 외국으로 출국하려 한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도의회에 도의원이 갑질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의원 부당행위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녹색정의당 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도의원이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논란이 일어 제명당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며 “도의회는 도의원들의 폭언·막말·갑질 방지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호

2024년 04월 25일 (목)

KBS 춘천

강원

“콩 까먹는 소리”, “설치니까”...지방의원 막말 논란

[앵커]

잊혀질 만 하면 지방의원들의 막말이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의회 의원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는 논란이 제기돼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를 상대로 한 도의회의 올해 첫 도정질문 자리.

한 도의원이 도청 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김용복/농림수산위원장 : "그게 몇 년도입니까?"]

[이경희/강원도 복지보건국장 : "2천, 99년, 91년도입니다. 91년도부터 해서..."]

[김용복/농림수산위원장 : "옛날 거 콩 까먹는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또 다른 공무원이 불러 나옵니다.

[김용복/농림수산위원장 : "빨리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설치니까."]

이 모습은 영상회의 중계망으로 도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방의원의 '갑질'과 '막말'이 도를 넘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도 도의회 의장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신성호/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하수인이 아닌 동반자의 입장으로 존중하고 소통·협력하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해당 도의원은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용복/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 "평상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도. 제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고 입장문을 냈고."]

또, 도청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은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고순정 flyhigh@kbs.co.kr

G1방송

2024년 04월 25일 (목)

강원

녹색정의당 도당 "도의원 막말 대책 마련해야"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지난 23일 도정질의 중 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녹색정의당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말 도의원의 막말 논란에 이어, 반년도 안돼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의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회는 뒤로 물러나 있지만 말고 도의원들의 폭언·막말·갑질 방지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2면

“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를”

도청공무원노조·정의당

속보=도정 질문 중 도의원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본보 25일자 2면 보도)이 되자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녹색정의당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원이 도 국장들에게 ‘공 까먹던 소리하지 마시고’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해 도청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의원의 공개사과,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두원·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인물동정 27면

◇김길수도의회기획행정위



원장(영월)은 26
일 오전 10시 영
월 보덕사에서
열리는 보덕사
봉축법요식 및
단종추모영산대재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인물동정 15면



홍성기(홍천·왼쪽)도
의원·전명준 홍천문
화재단 이사장은 26일
오전 10시 도시산림공
원토리숲에서 열리는
강원 n 홍천 산나물축
제 개장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인물동정 12면



유순옥(비
례) 의원은 26일 오후 2시 강
릉 세인트

컨벤션 연회장서 열
리는 강원여성 100인
회 제5대 한경숙·제6
대 김동자 이사장 이·
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인물동정 10면



박찬홍도
의원은 27
일 오전 10
시 소양강
댐하류주

차장에서 열리는 제
16회 소양강댐 용녀미
길 축제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1면

첨단산업 보증 수표 강원 혁신특구 목전

중기부 위원회 30일 최종확정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윤곽도
도, 의료·헬스 육성 가속 전망

강원형 첨단산업의 향방이 오는 30일 분수령을 맞는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규제자유 특구위원회를 열어 국내 최초로 법률 등이 정하지 않은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규 확정한다. 또, 강원 등 전국 11개 시·도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평가도 이날 실시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 지난해 12월 말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와 부산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각 후보지로 선정했었다.

후보지 선정 자체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최종확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는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선정을 발판으로 춘천과 원주에 기반을 둔 정밀의료·헬스케어 등 도내 첨단산업 육성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제 기준에 맞

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미래첨단기술의 혁신과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파격적으로 모든 실증이 허용되기에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강원형 첨단산업 육성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정 기한은 2027년까지 4년이며,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 범위는 강원도 전역이 된다.

30일 예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발표평가 역시 주목된다.

이번 공모에는 비수도권에서 강원을 비롯해 충북·대전·경북·전남·전북과 수도권에서 인천과 경기 수원·고양·성남·시흥시 등 11곳이 나섰다.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단지 조성 인허가 단축과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조성, 세금·부담금 감면, 정부 연구개발(R&D) 국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도는 홍천(항체)과 춘천(예방·진단)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구성, 강원 바이오 헬스산업을 도전역에 연계하기로 했다. 박지은 ▶관련기사 2면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2면

꾸준한 투자·육성 '강원형 바이오' 전국 거점 부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 총력

권역별 특화분야 육성 등 주목

지역기업 6곳 상장 경쟁력 강화

도-이화여대 기술교류 협약 등

30년 간 지역 자체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온 강원형 바이오산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강원형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각인시키고 있는 등 대한민국 바이오 신(新)거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오는 30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발표평가 이후, 올해 상반기 중 판가름나게 될 특화단지 유치전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형 바이오 산업은 지난 1998년 춘천시가 생물산



강원특별자치도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지난 24일 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청

업육성시범도시로 지정 선정된 것과 동시에 지자체 최초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시작했다. 이와 연계, 춘천바이오 산업 진흥원이 설립되는 등 강원형 바이오산업의 몸집을 키워나갔다.

강원형 바이오헬스산업 추진과 관련, 도는 도전역의 바이오클러스터화를 통해 권역별 특화분야 육성에 나서

고 있다. △춘천권(진단·예방·의약) △원주권(디지털헬스·의료기기) △홍천권(향제약약품) △강릉·동해안권(천연물·해양) △접경지역권(소재) △남부내륙권(실증) 등이다.

또, 최근 3년 간 강원 바이오헬스산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바이오

헬스산업과 관련,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력 5위(3211명), 산업체 6위(45개), 투자비(연구개발·시설·1223억4300만원) 6위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 10월 우수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고, 같은해 12월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로 선정돼 최종 확정이 가시화됐다.

전국 유일의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와 전국 최초 체외진단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유한바이오로직스와 휴젤 등 지역이 육성한 6개 기업이 상장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기업을 배출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2년엔 바이오의약 분야로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으며, 도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공동대응을 위해 각 기업 및 기관 등과 특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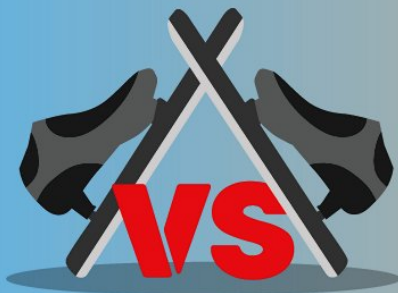
지난 24일 강원도와 이화여자대학교는 도청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 특화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등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전희선 강원도 바이오헬스과장은 "지역 자체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는 강원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1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전쟁

강원 (3곳)을 비롯해 경기(3곳), 인천(1곳)지역 기초지자체 7곳이 뛰어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이 5월 평가를 앞두고 과열되고 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은 곧 철거를 앞둔 서울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평가 작업이 시작된다. 심예섭

▶ 관련기사 9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전 현황

양주 Yangju

부지: 광사동 나리공원 약 10만㎡ 시유지
장점: 기존 태릉국제스케이트장과 불과 약 16km 거리

김포 GIMPO

부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장점: 김포골드라인,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등 우수한 교통 여건

인천 서구

부지: 청라동 1-1002 일원 청라국제도시 6블록
장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어지는 제3연륙교, 공항철도, 도시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철원

부지: 동송읍 오지리 일원 군부대 유휴지
장점: 지역 균형발전 가능, 점경지역에 대한 배려

춘천

부지: 송암동 137번지 일대 6만㎡ 면적의 시유지
장점: 조기 착공 가능, 수도권과 인접.

원주

부지: 판부면 서곡리 옛 군부대 부지
장점: 기반시설 구축 소요 낮음. 수도권과 인접.

동두천

부지: 소요산 인근 미군 반환 공여지 약 8만9000㎡
장점: 소요산 확대개발 계획에 따라 부지 30만㎡ 이상으로 확장 가능

‘부지 vs 접근성’ 격돌...유치 도전 지자체 정치력 시험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경쟁 치열

전국 지자체 7곳 중 도내 3곳
내달부터 대체지 평가 시작
22대 총선 공약, 적극 지원

평가 1번 ‘접근성’ 수도권 유리
김포·인천 공항 강점 내세워
도내 지자체 동력 분산 우려도
체육계 “지역간 협력체계 필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지 결정에 관한 평가가 5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강원(춘천·원주·철원)과 경기, 인천 등 기초지자체 7곳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체지 유치 신청을 받았다. 현재 도내에선 춘천·원주·철원, 경기도에선 양주·동두천·김포,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했다. 5월 중으로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리고, 복수의 후보지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도 제시되면서 각 도전 지자체간 정치력 대결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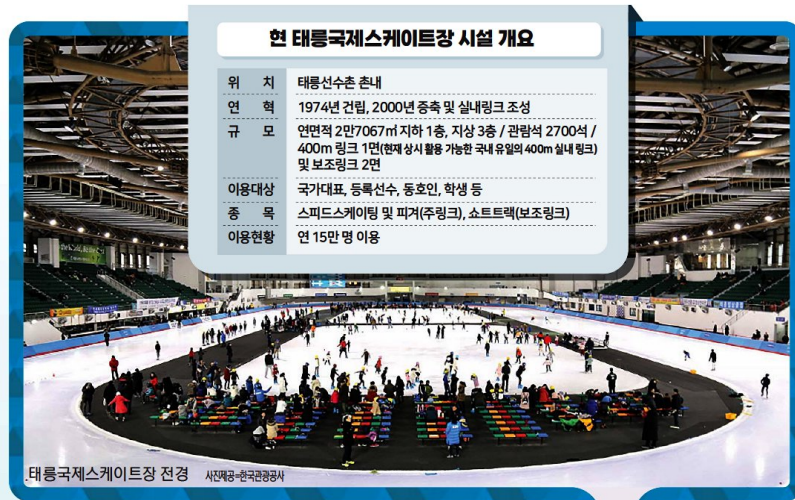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본다.

■유치전 뛰어난 7개 지자체 분석

춘천은 송암동 137번지 일대 6만㎡ 면적의 사유지를 경계장 부지로 제시했다. 조기착공이 가능하고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1934년 옛 춘성군체육회 주최 비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제52회 전국체육대회 겨울빙상대회(1971년), 겨울아시안 게임(1991년) 등을 개최한 비상상의 본고장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철원은 동송읍 오지리 일원 군부대 유휴지를 스케이트장 최적지로 선택했다. 수도권 1시간 내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철원은 군부대 유휴지 활용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지자체 등 부처 간 협력 강화 모델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는 1975년부터 50여년간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판부면 서곡리 옛 군부대 부지를 제안했다. 평지였다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반시설 구축 소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광역교통망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 의료·휴먼 인프라, 교육 여건 등도 갖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전경 사진제공=춘천관광공사

현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시설 개요

위 치	태릉선수촌 춘내
연 령	1974년 건립, 2000년 증축 및 실내링크 조성
규 모	연면적 2만7067㎡ 지하 1층, 지상 3층 / 관람석 2700석 / 400m 링크 1면(한때 상시 활용 가능한 국내 유일의 400m 실내 링크) 및 보조링크 2면
이용대상	국가대표, 등록선수, 동호인, 학생 등
종 목	스피드스케이팅 및 피겨(주링크), 쇼트트랙(보조링크)
이용현황	연 15만 명 이용



춘천시 직원들은 최근 시청 1층 로비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응원했다.

춘천

“수도권 가까운 비상상의 본고장
송암동 사유지 조기착공 가능”

원주

“옛 군부대 부지 기반시설 갖춰
광역교통망·의료인프라 강점”



원주시는 최근 동부 복합체육센터 공연장에서 14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 출범식을 하고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고 나섰다.



철원군은 최근 고석정꽃밭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한마당축제에서 철원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응원했다.

철원

“군부대 유휴지 보편사례 기대
수도권 1시간, 접경지 발전”

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양주는 광사동 나리공원 약 10만㎡ 사유지를 제시했다. 기존 태릉국제스케이트장과 가까워 불과 약 16km에 불과한 것이 큰 장점이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전철 7호선 연장 예정 등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동두천은 소요산 인근 미군 반환 공여지 약 8만9000㎡를 부지로 선택했다. 전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부지가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부지 확장성도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통여건이 우수하고, 부지 확장성도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김포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부지를 부지로 내세웠다. 시는 김포골드라인과 함께 최근 발표된 서울 5호선 연장,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인천 서구는 청라동 1-1002 일원 청라국제도시 6블록을 부지로 선택

했다. 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어지는 제3연륙교, 공항철도, 도시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을 내세우며 유치를 추진 중이다.

■수도권 vs 강원 싸움 접근성 불리

이기를 대한체육회장에 따르면 평가항목 10개 중 첫 번째가 경기장 접근성이다. 김포와 인천 서구는 공항 접근성을 내세웠고, 양주는 제시한 부지가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가장 가깝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두천은 전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부지를 확보했다

고 내세웠다.

접근성만 따졌을 때 도내 3곳보다 수도권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내 체육계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스피드스케이팅장을 공동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양주는 지난 1월 2일 의정부와 국제스피드스케이팅장 공동추진 협약을 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두 지자체는 국제스케이팅장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유치 성공 시 시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2대 총선, 스케이트장 유치 공약

재선에 성공한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선인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국제스케이팅장 유치를 내세웠다. 허 당선인은 지난 15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의원이 된 진중오(춘천 출신) 당선인과 함께 국제스케이팅장 유치를 비롯한 춘천시 역점 추진사업에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 서구에서는 국회 첫 입성에 성공한 이용우(인천 서구을) 당선인이 국제스케이팅장 유치를 공약했다. 3선 고지에 오른 김교흥(인천 서구갑) 당선인은 이번 총선 공약에는 없었지만, 지난 2월 15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유치 건의를 전달한 장본인이다. 특히 2018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분야 부회장을 지내며 이기흥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졌다.

7개 지자체 중 가장 정치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당선인은 5선 고지에 오른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당선인이다. 특히 정 당선인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양주시민의 5대 숙원 중 하나로 국제스케이팅장 유치를 꼽을 정도로 당선인들보다 적극적이다. 정 당선인은 지난 3월 4일 강수현 양주시장과 국제스케이팅장 유치 관련 협력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하며, 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3선에 성공한 김성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당선인 역시 이번 총선 공약에 국제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를 내세웠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 철원이 동시에 국제스케이팅장 유치에 뛰어들면서 동력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양화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각 지자체마다 장점과 당위성을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유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한 곳으로 힘을 모으긴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긍정적인 점은 총 7개 부지 중 기존 1곳이 아닌 3곳을 선정해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도내 지자체 중 한 곳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섭섭섭 yes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경제 06면

‘빛바랜 관광 1번지’ 강원 방문 주춤

작년 관광객수 전년비 100만명↓
인프라·콘텐츠 부족 문제 꼽혀
1분기 매출 성장률 0.7% 하락

2022년 국내여행 방문지 순위 2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정 관광지 보유 지자체 등 ‘국내 관광도시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방문객수가 제자리걸음을 멈추고 있는 등 강원도 관광산업의 체질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관광업의 회복 요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관광객 수는 1억 5200만 명으로 전년보다 100만명 감소했다. 2021~2022년, 2300만 명이 늘은 것과 비교하면 강원도를 찾는 발걸음이 지난해 유독 주춤했던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관광객은 48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는 30여만 명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185만 5000명) 대비 26.4% 수준에 머물렀다.

도내 관광업의 매출 성장도 부진했다. 올해 1분기 도내 관광업 매출 성장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7%

하락했다.

지난해 5.4% 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도내 숙박·여행·요식업 등 관광업종의 매출 하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포털에서 강원도 여행 검색량도 한 줄었다.

도내 관광업의 정체 요인은 열악한 숙박 인프라와 식상한 여행 콘텐츠 등이 꼽혔다. 강원도 관광숙박업체는 228개로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419개)와 부산(256개)보다 적다. 최근 여행객의 선호도 높아진 호텔과 복합리조트가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도내 주요 관광 프로그램은 주로 자연환경에 의존해 도내 관광지의 활용도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업이 강원도의 주력 산업을 고려하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광업은 강원지역 내 총생산의 9.9%를 차지한다. 관광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비중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강원도가 최근 발표한 5대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 과 함께 관광 콘텐츠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효정 한은 강원본부 조사역은 “랜드마크 호텔과 휴식·휴양형 고급 숙소를 영서·영동 권역에 균등히 조성해야 한다”며 “관광지 연계 할인 확대를 비롯해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 도입, 테마관광 콘텐츠 발굴·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종합 01면

올해 폐광기금 1,710억 ‘역대 최고액’

(잡정 집계)

올해 폐광기금이 1,710억원으로 잡정 집계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강원랜드의 경영이 회복세를 보인 데다 2021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광기금 납부 기준이 변경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 20년간 1조7,000억원 이상의 폐광기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실효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중 올해 폐

5월 확정 후 도·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문경·화순에 배분
20년간 도내 1조7천억 투입에도 폐광지 소멸 위기는 가속화
주먹구구식 기금사업 문제 지적… 道 “중장기 계획 수립할 것”

광기금을 확정해 도와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남 보령군,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에 각각 배분한다. 올해 폐광기금은 1,710억원으로 추산되며 당초 예상치(1,500억원)를 웃돈다. 또 폐광기금이 도입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7년 1,665억원, 2016년 1,625억원이 직전

까지 최대 기록이었으며 2018년 이후로는 강원랜드의 경쟁력 약화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적자로 ‘폐광기금 0원’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 폐광기금 배분의 원인은 2021년 기금 산출방식

변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의 25%로 규정돼 적자시 기금이 한 톨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현실화됐다. 이에 2021년 폐특별 개정을 통해 납부기준을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후 2022년 1,007억원, 2023년 1,590억원, 올해는 잡정 1,71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수천억~수조원에 달하는 폐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2001년 이후 폐광기금은 총 2조

2,963억원으로 이 중 1조7,000억원이 강원지역에 투입됐다.

하지만 폐광지의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올해 태백, 내년 삼척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2045년까지 예상되는 폐광기금은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더 이상은 ‘주먹구구’식 기금사업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기금사업 시시·군,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 효과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사회 05면

‘한명이 240대 본다’ CCTV 감시 공백 우려

통합관제센터 인력난

‘10여명 근무자가 수천대 관리
범죄·재난 신속 대응 어려워
도 “지능형 관제체계 도입 예정”

범죄와 재난·재해 감시를 위해 도입된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감시 공백의 우려를 낳고 있다. 1명당 많게는 230대의 CCTV를 감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2020년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공용 CCTV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대관 ‘아르고스의 눈’(백 개의 눈을 가진 거인)’이라고 불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일 춘천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40대 남성을 CCTV로 포착, 경찰에 신고해 검거를 돕는 등 각종 범죄 예방 및 단속에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CCTV 화면을 확인하는 인력이 부족해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시의 경우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12명이 감시하는 CCTV는 총 2,770대다. 1명당 230대를 담당하는 셈이다. 원주시도 14명의 근무자가 3,382대의 CCTV를 담당하고 있고 강릉시는 15명이 1,859대의 CCTV를 감독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A씨는 “한 번에 수백 개의 CCTV 화면을 봐야 해 모든 영상을 면밀히 감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약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느냐는 질책을 받을까 우려돼 매 순간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관제센터에 지능형 관제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능형 관제체계는 인공지능(AI)이 영상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 이상 신호를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감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지역 11면

원주 관광인프라 확장 랜드마크 띄운다

소금산 에스컬레이터 7월 완공
케이블카 10월 준공 연말 개통
반곡-금대 활성화 사업 본궤도
10월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변신

원주관광인프라가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원주 대표 관광 명소인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대규모 신규 관광 인프라를 장착하고, 원주 관광의

쌍두마차가 될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원주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계획한 에스컬레이터를 오는 7월 완공한다. 최초·최고·최장 산악용 에스컬레이터로 총 47기며 7월 완공 후 일괄 개통한다. 케이블카도 들어선다. 오는 10월 준공해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10인승 캐빈 22대로, 탑승장에서 출렁다리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도 그

동안 걸림돌이었던 부지내 국유지 확보 문제가 전면 해결,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최근 반곡역에서 치악역까지 약 9km의 국유지와 철도시설물인 터널, 교량, 선로 등을 232억원에 매입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인허가 후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인 반곡역을 중심으로 철도 문화를 담은 공원을 선보인다. 이색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2km의 파리굴

에 최첨단 IT·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테마터널인 ‘금빛파리굴’로 조성된다. 반곡역과 금대역을 오고갈 관광열차(2량)도 선보인다.

여기에 전국 명소로 떠오른 천연기념물 제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일대가 오는 10월 광장으로 변신한다. 은행나무로 둘러싼 보행자 도로, 주차장도 신설된다. 문막읍 대둔IC에서 반계리 은행나무 구간에는 소위 은행나무 터널을 연출할 계획이다.

정태욱 tae92@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지역 12면

강릉 도로망 확충 ‘20분대 생활권’ 도약

오동교~학산교회~학산 교차로
2026년까지 4차선 순차적 확대
시 “지속적 지역연결 접근 개선”

강릉시가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간 도로 연결망을 확충, 20분대 생활권 형성에 나서 도시 팽창이 기대된다.

시는 도심지에서 구정면 등 시 외곽 등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사업비 207억원을 들여 4차선으로 확충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시도 3호선인 구정면 오동교~학산교회 일대 1.24km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오동교 재가설을 위한 교량을 철거한다. 이에 따라 구정면 자율방범대~구정 보건지소 앞까지 약 150m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했다.

시는 또 구정면 학산교회~학산교차로까지 1.5km 구간에도 사업비 214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충한다.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권의 지역 균형발전과 천

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도로개설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0월쯤 착공해, 2026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내곡동 관동대 정문~한라아파트간 도로 415m 구간에도 사업비 7억원을 들여 4차선으로 확충, 5월말까지 완공키로 하고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같이 관동대 정문~오동교~학산교회~학산교차로 등의 도로가 이어지면 시청

앞 도심권에서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시는 학산~남향진 해변까지, 남향진~경포 일원, 학산~유천택지 등 도심권에서 시 외곽도로, 해안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구중 도로과 읍면시도 담당은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도로 연결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시의 도로를 유기적으로 연결,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사설/칼럼 19면

국제 빙상장, 비수도권 건립 마땅

-스포츠 시설마저 수도권 집중 땀 불균형 심화

태릉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의 대체 빙상장 건립 부지가 어디로 선정될지, 유치에 도전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철원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제 빙상장이 들어서면 선수와 관중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해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내 지자체도 서울 접근성 등을 내세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경기 시설마저 경기도에 건립한다면, 스포츠 시설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한체육회가 조기에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전국 7개 지자체 단체장과 만나 빙상장 건립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5월 중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지 선정 위원회를 열어 평가 기준, 항목, 실사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스케이팅장은 규모 면에서 세계적입니다. 400m 규격의 훈련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데 20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기도 지속해 열려 지역 경제

에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서는 3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춘천은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를 비롯한 빙상의 본고장이라는 점과 수도권 접근성을, 원주는 여주~원주 복선 전철 개통을 비롯한 우수 광역 교통망과 의료·훈련 인프라 및 교육 여건 등을, 철원은 군(軍) 유휴 시설 활용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지역 균형 발전·소외된 접경 지역에 대한 배려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많은 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나서, 도내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 인천 서구 등 4곳이 활동을 벌입니다.

국제적인 체육 시설만큼, 선수들의 이용 편의성과 관중 규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시설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불균형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각종 산업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 국제 빙상장까지 들어선다면,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경기 지역의 교통 접근성도 강원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국제 빙상장은 비수도권인 강원도에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

사설/칼럼 25면

스토킹 피해 상담 급증, 중범죄로 적극 대응해야

도내 스톱킹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2배 넘게 늘어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스톱킹 피해 상담 건수는 307건으로 스톱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31건과 비교하면 2.3배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 이미 27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가 감소하거나 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스톱킹 피해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톱킹·데이트폭력·디지털 성폭력과 같은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위기에 처한 폭력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핫라인(Hotline)으로 불린다. 많은 여성이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스톱킹 피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한다. 실제 스톱킹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스톱킹 범죄 가해자를 영혼의 파괴자라고 하는 이유다. 2차 가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모호한 양형기준으로 무

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 보니 스톱킹을 당해도 피해자는 보복이 무서워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021년 10월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효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됐지만 스톱킹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올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스톱킹 범죄 사건은 형량이 대폭 상향되지만 여전히 스톱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스토킹 범죄를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나 개인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최근 발생한 스톱킹 범죄 사례를 보면 스톱킹이 폭행, 방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어떤 범죄로 진행될지 그 위험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톱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벌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에 틀림없는 만큼 엄히 다스려 더는 스톱킹 범죄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26일 (금)

사설/칼럼 19면

고물가 방관하면 관광산업 타격 이어져

-강원 점심값 전국 평균비해 2배 올라, 2·3분기 지속 우려

직장인 점심값이 처음으로 1만원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나 고물가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신'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4년 1분기 평균 점심가격은 1만96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9563원에서 5.5%p 올랐습니다. 강원지역은 전국 평균 식대에 비해 700여원 정도 낮기는 하지만, 2배 이상 급격한 인상을 보여 올들어 식대비용 부담이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심값 1만원 시대를 알린 이번 분석은 모바일식권 '식신' 서비스 이용자에 제한된 통계이긴 하나, 하루 23만 여명이 이용하는 의미있는 지표입니다. 올 1분기 강원 평균 점심가격은 935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367원에 비해 11.7% 올랐습니다. 충청 13.7%에 이은 높은 상승률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도 강원이 충청과 함께 대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고물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인천은 인하됐으며 서울 0.3%, 제주 2.5%, 대구·대전·전라권에서 3~4%대 인상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강원이가파른 인상현상에 대해 깊이있는 원인분석과 해소책이 필요합니다.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식자

재와 외식비 등 먹거리 가격에 민감한 때입니다. 고물가는 당장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소비심리를 위축하고 내수부진을 심화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복합적인 파장을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식대가 서울에서 먼저 인상된 후 비수도권 지역으로 번진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 진단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원의 급격한 상승률이 올 1분기에 그칠 것인지 혹은 내리 계속될 지에 대한 것도 큰 관심사입니다. 점심값은 도내 직장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강원경제의 주력인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밀접한 사안입니다. 강원의 점심 식대가 대폭 올랐다는 뉴스는 관광에도 도움될 리만무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도내 여름철 관광지 및 축제 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질과 가격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된 몇 번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 나타난 점심 식대 인상이 2, 3분기에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물가 기조 속에 새로운 소비현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변화의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강원경제가 급격히 추락할 수 있음을 살피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